1 _ 외국 R&D 센터 유치 현황

국내 R&D 활동 선진화 발판 삼는다

글 | 김주한 _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장 jkim@most.go.kr

참여정부 이전에 국내 진출한 외국 연구개발(R&D) 센터는 거의 모두 민간기업이 경영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R&D 센터를 설치하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외국인 지분율 100%인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전체의 절반이 넘는 연구소가 외환위기 이후에 새로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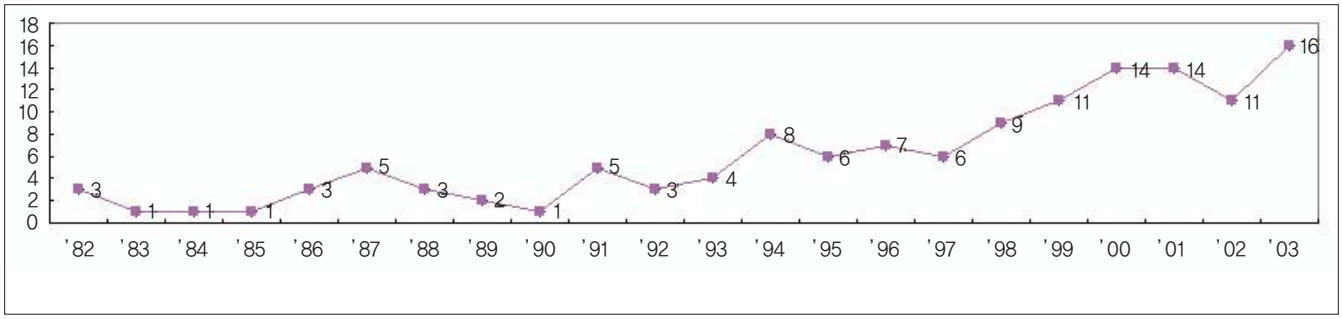
외국고급연구인력 · 첨단과학기술 유입이 주목적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외국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물류, 교통, 금융 등 각 분야에서 동북아 허브 구축이 추진되었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동북아 R&D 허브 구축'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핵심 R&D 지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 R&D 허브 구축에 있어 외국 R&D 센터의 유치는 핵심 중의 핵심 정책이다. 외국 R&D 센터 유치 이외에도 동북아 기술경영과정 운영, 한 · 중 · 일 과학기술협력협의체 구축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내용, 예산, 건 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국 R&D 센터 유치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외국 R&D 센터를 유치하려는 목적은 외국의 고급 연구인력, 첨단 과학기술을 한국으로 유입하여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높이고 우리 나라가 특히 미흡한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연구개발 관리기법이나 연구소 운영 노하우 등을 국내에 도입 · 확산시켜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선진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외국 R&D 센터 유치정책은 2004년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하여 단기간에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유치한 외국 R&D 센터는 모두 46개에 달하는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8개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유치한 경우다. 과기부는 주로 공공연구기관을 유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지분율 100%)의 국내 부설연구소 설립 추이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4)

하고 있고, 산자부와 정통부는 기업 R&D 센터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4년 9개에서 2005년 21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6년에는 16개로 다소 줄어들었다. 참고로 2007년에는 3개 중앙 부처와 8개 지자체가 30개 가까운 외국 R&D 센터의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23개, 경기도 10개, 대전 4개, 부산 · 경남 각 3개, 충남 2개, 인천 1개로 지역별 편중이 심한 편이고, 국적별로는 미국 24개, 독일 7개, 영국 4개, 일본 3개, 국제기구 2개, 프랑스 · 러시아 · 오스트리아 · 싱가포르 · 리히텐슈타인이 각 1개로 미국(52%)과 유럽(3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외국 R&D센터 유치관련 법규' 정비

현재 유치 외국 R&D 센터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 제도와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유치 외국 R&D 센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정 · 금융지원, 연구인력 지원 및 상당수의 조세감면 제도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제도이긴 하지만, 국내 연구주체(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혜택들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외국 R&D 센터 유치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가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중앙 부처는 물론, 지자체들도 외국 R&D

외국 R&D 센터 유치 현황

정부기관	연도	유치 연구소 (분야, 지역)	
과기부 (9개)	04	· 파스퇴르(생명공학, 경기와 공동)	· 카벤디쉬(나노 · 광전자학, 대전)
	05	· 러 국립광학연구원(광학, 경기) · NIH(결핵신약개발) · RIKEN(NT/BT/IT융합기술)	· APEC기후센터(기상분야, 부산) · 국제분자생물사이버랩(BT분야)
	06	· 국제 회전익 R&D허브연구소(헬기)	· KU-바텔연구소(의료용 센서, 서울)
산자부 (16개)	05	· ATI(DTV) · STMicroelectronics(반도체) · JATCO(자동차) · Dupont(정보전자소재)	· Photronics(반도체) · TI (반도체) · National Semiconductor(반도체) · Siemens(의료기기)
	06	· Balzers(코팅분야) · AVL List(디젤커먼레일시스템) · Molex(통신, 디스플레이 회로) · Kimberly-Clark(바이오재료, 경기)	· RFI Global(핸드폰, 스마트카드, 경기) · ZF-Sachsa(진폭감응형 댐퍼) · TI Automotive(플라스틱 연료탱크) · Google(인터넷 검색)
정통부 (11개)	04	· Intel(디지털홈.무선통신, 경기) · Fraunhofer IGD(가상시뮬레이션) · Siemens(Network장비)	· IBM(텔레매틱스) · HP(RFID)
	05	· On-Semi(모바일Solution) · Microsoft(모바일Device)	· Sun(모바일SW)
	06	· SAP(정보시스템) · 모토롤라(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 TI(모바일 멀티미디어)
산자 · 정통 공동(2개)	05	· AVAGO Technologies(반도체)	· AMD(반도체 설계)
지자체 (8개)	04	· 덴소풍성(자동차, 경남)	· 델파이(자동차부품, 경기도)
	05	· 프로메가연구소(BT, 대전) · 허친슨암연구소(바이오마커, 대전)	· Axesstel(CDMA, 경기도)
	06	· PNU-IFAM(생산기술, 부산) · PNU-RR(항공기 엔진, 부산)	· PNU-IGB(바이오, 경남)
계		46개	

※ 정통부와 산자부가 각각 유치한 Intel과 National Semiconductor는 '07년 철수

국내 유치 R&D 센터의 대표격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개소식

2008년 이전할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판교 착공식

센터 유치 촉진을 위한 별도사업을 신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부는 2004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을 신설하여 2004년 90억 원, 2005년 190억 원, 2006년 295억 원, 그리고 2007년에는 325억 원 등 어려운 예산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5년부터 '해외R&D센터 유치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유치 관련 정보 공유,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등을 총괄 · 조정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해외 R&D 센터 유치 관련 법규 정비방안'을 마련(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06.3.23)하여 재경 · 과기 · 산자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과학기술부는 외국연구기관도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개정(2007년 1월)하였고, 고도기술을 국내에 도입한 해외 R&D센터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변경(2006년 5월)하였으며, 유치 R&D 센터에 약속한 투자와 지원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해외 R&D센터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2006년 11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기업이 투 · 융자를 받기 위한 경우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006년 8월)하였고, 현금 지원조건 중 투자금액 요건을 삭제하고 석사 이상 학위의 상시연구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며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한 출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6년 11월)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국내 R&D센터에 파견 · 근무중인 외국인이 비취업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06년 8월)하였고,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물부담 인정범위를 현행 인건비, 시설비 등에서 부동산, 소모품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R&D 활동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

외국 R&D 센터 유치를 본격 추진한지 이제 겨우 3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유치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형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는 22개 외국 R&D 센터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운영이 견실하고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R&D 센터의 설립목적은 신기술 개발(39%), 상용화기술 개발(36%), 기초연구, 공공기술 개발, 신약개발 등 전주기 기술 확립 및 동남아 거점 확보(23%)로 나타나 국내 진출 외국 R&D 센터의 역할이 단순한 생산지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외국인 연구원 수가 8.8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0.9명에 비해 10배나 되고, 3년간 평균 투자액이 68억5천만 원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액 58억5천만 원(현물 포함)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총 특허출원 93건 중 해외출원이 36건이나 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 R&D 센터 유치가 더욱 늘어나고 유치된 센터들이 국내에 장기간 정착하면서 국내 연구계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나라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정통부가 2004

'외국R&D센터, 국내유치를 진단한다'

외국 R&D 센터 유치 지원 제도 및 사업

구 분	지원내용	지원 근거	비 고
현금지원 (Cash Grant)	○ 500만 달러 이상의 R&D 투자시 – 토지매입 · 임대료, 건축비, 연구 기자재, 고용 · 교육 · 훈련 보조금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비율은 투자규모, 협상 등에 의해 결정
재정 · 금융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 연구개발비 전액(일부) 출연 ○ 정부가 운용하는 과기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융자 지원 ○ 벤처캐피탈을 통한 기술개발 · 기업화자금의 투 · 융자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술 개발자금 지원	기술개발촉진법 등	과기부 · 산자부 · 정통부 과기부 · 정통부 재경부 재경부
부지공급	○ 외국기업 전용단지 : 무상임대 또는 75%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 : 100% 감면 ○ 자유무역지역 : 최대 100% 감면 ○ 관세자유구역 : 최대 100% 감면	공업배치 · 공장설립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정법 국제물류기지육성법	산자부 시 · 도지사 산자부 재경부
연구인력 지원	○ 석 · 박사급 연구인력의 병역특례 – 3년간 근무조건으로 병역 면제 ○ 신진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1인당 3천만 원 한도) ○ 병역업체 지정시 가점부여(5점)	병역법 외국 R&D센터 유치기반 구축사업 병역지정업체추천기준	교육 · 과기부, 병무청 산자부 과기부
조세감면	○ 소득 · 법인 · 취득 · 등록 · 재산 · 종토세 및 외국인 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 · 소득세 : 최초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관세 · 특소세 · 부가세 : 신고 후 3년 이내 통과시 100% 감면 ○ 고도기술 제공자 소득세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 최초 5년간 100% 감면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수입금액의 3%)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 공제(투자금액의 7%) ○ 학술연구용품 관세 80% 감면 ○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 · 소득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재경부
세금 · 연금 면제제도	○ 파견연구원에 대해 세금납부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 면제 * 비취업비자도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반연수(D-4) 비자
연구비 지원	○ 유치 R&D 센터에 대해 3~10년간 연구비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비 일부 지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활용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과기부 정통부
지자체 지원사업	○ 유치 연구소 건립비의 50% 지원 ○ R&D 능력 및 기술력 향상 지원 – 공동연구사업 지원 ○ 지역 특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 1개 대학에 3억5천만 원 지원 ○ 신규 R&D센터에 대한 시설비 등 기반구축 사업비 일부 지원 ○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등 지원	세계 우수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서울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다국적기업들의 R&D 센터 입지 분포 현황

(단위 : %)

현재 입지국			향후 5년간 입지희망국		
순위	국가	비율(%)	순위	국가	비율(%)
1위	미국	58.8	1위	중국	61.8
2위	영국	47.1	2위	미국	41.2
3위	중국	35.3	3위	인도	29.4
3위	프랑스	35.3	4위	일본	14.7
5위	일본	29.4	5위	영국	13.2
24위	한국	4.4	13위	한국	2.9

*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국가별 외국 R&D 센터 지원 비교

국가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인도	한국
법인세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신기술도입시 26% 감면	12.5% 적용		5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관세	설비수입 면세			공공R&D센터 무관세	학술연구용품 80% 감면
수입세				150% 공제	
영업세	기술료에 관한 부분 면제				
현금지원			투자금액의 최대 40%		투자금액의 최대 15%
연구비 지원			20%까지 2년 지원		최대 10년간(수억~수백억)
인건비 지원					1인당 3천만원

년 유치한 인텔 R&D 센터가 2007년 4월 철수했고, 산자부가 2005년 유치한 내셔널 세미컨덕터도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텔의 한국 R&D 센터는 유일한 영리 연구법인이었고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하나인 홈네트워크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철수의 여파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 신규투자를 하거나 본사의 연구소를 유치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주요국의 외국 R&D 센터 현황을 보면 중국에 750개로 가장 많고, 아일랜드에 300개 이상, 인도에 200개 이상인데 비해 한국에는 46개에 불과하다. 다국적 기업들의 R&D 센터 설립지역을 보면 미국이 1위(58.8%), 중국이 2위(35.3%)인 반면, 한국은 겨우 4.4%로 24위이며, 향후 5년간 선호도에서도 중국이 1위(61.8%), 미국이 2위(41.2%)이고, 한국은 2.9%로 13위에 그쳤다.

중국, 아일랜드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들이 조세감면, 연구비 지원 등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R&D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느냐이다. 중국, 인도 등은 내수시장 규모가 크고 양질의 연구인력을 싸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국적기업들에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자녀교육을 위한 국제학교와 외국인이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고, 주거비가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 지원시책을 한층 강화하고 외국인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ST

글쓴이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전자공학과와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책과정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제20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